

종합·해설

광주비엔날레 신정아 감독 어떻게 발탁했나

관련법 제정 정쟁에 걸돌고 정부, 간척지 양도 '미적미적'

■정권末 표류하는 전남 현안사업

F1 대회·J프로젝트 등 뼈격

광주~완도고속도로도 연기

전남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해왔던 대규모 현안들이 정권말기에 접어들면서 걸돌고 있다. 이들 현안 대부분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계획된 만큼 현 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업들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F1대회=6월 임시국회에서 F1대회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절대공기상 2010년 첫 대회 개최를 위해 7월중 경주장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표에 불용이 떨어졌다. 전남도는 예정대로 이달 중 경주장 공사를 시작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F1대회 경주장 착공을 위해서는 영암군 삼호읍 난전·삼포리 일대 간척지 56만평에 대한 우선 사용승낙이 급선무다. 현재 국무조정실과 농림부가 관련 절차를 논의중이나 부처간 조율이 얼마나 원활할지가 관건이다. 서남해안 관광래저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을 선도할 F1대회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J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의 적극 대응이 절실하다.

◇J프로젝트=전체 사업을 주도할 3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된 상태에서 사업예정부지인 해남 산이·영암 삼호 일대 간척지 양도·양수와 투자유치 활성화가 시

급하다. 간척지 소유자인 농림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간척지 양도·양수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간척지 양도 양수문제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었던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활발한 투자유치를 위한 법령 정비와 사업예정지 주변 인프라 보강도 정부의 몫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 제정에 필수적인 공청회 등을 거치지 못하고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전남도는 이 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제출 시점부터 타지역 국회의원들이 목포·무안·신안을 중심으로 지연하는 것은 특례라고 문제를 제기한 터라 정쟁에 휘말릴 경우 입법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정치권이 낙후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야 순조롭게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급=최근 감사원이 설계중인 광주~완도고속도로에 대해 착공연기를 권고했고, 건교부가 2012년 완공 예정인 목포~광양고속도로 완공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남지역 기간교통망 확충에 적신호가 켜졌다. 두 고속도로는 서남권 발전은 물론 국가 물류체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의지와 함께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박지영기자 unipark@kwangju.co.kr

인터넷 학력 자료만으로 '검증 끝'

후보 잇단 고사...선정위, 선정권 재단에 떠넘겨 철통 보안속 '깜짝 인선'...외부 검증 기회 차단

가짜학위 논란에 휩싸인 신정아 광주 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은 어떻게 발탁됐을까.

지난 4월30일 구성된 비엔날레 재단 감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에는 강연균, 김운수, 남상규, 박지택, 이용우, 이종삼, 홍라영, 황영성(이상 재단 이사)씨와 강태희 한국 예술 종합학교 교수, 김홍희 경기도미술관장, 유재길 홍익대 교수 등 11명이 참여했다.

선정위는 지난 5월 4일 최종 감독 후보로 김승덕 프랑스 다중 건축사업 프로젝트 디렉터와 박만우 전 부산비엔날레 총감독 등 2명을 재단에 추천했다. 그러나 1순위에 오른 김씨가 '함께 일할 외국인 공동감독의 추천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단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후보군에서 빠졌다.

감독 선임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 재단은 선정위에 재차 복수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다시 모인 선정위원들은 감론을 밖 끝에 김승덕 씨를 제외한 후보 8명 가운데서 감독을 뽑으라며 재단에 일임해버렸다. 선정위가 감독 선정권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선정위가 과학적 논의 를 통해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이다.

졸지에 감독 선임권을 위임받게 된 한갑수 이사장은 후보들을 개별면담, 의견을 타진했으나 대부분 감독직을 고사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이 과정에서 김미진 홍익대 미술대학 겸임교수, 김선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만우 전 부산 비엔날레 총감독, 윤진성 호남대 예체능대 교수, 이영철 계원예술대학교수, 이주현 CJ헬스빌 아트갤러리 관장, 장석원 전남대 예술대 교수 등 7 명이 배제됐다.

결국 재단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카드가 신정아씨였다. 문제는 재단이 신씨의 신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재단이 후보 검증 을 위해 선정위에 제공한 자료는 후보를 추천한 인사들이 작성한 프로필과 인터넷 등을 통해 확보한 학·경력 자료가 전부였다.

철저한 보안 속에 감독 인선작업이 이뤄진 것도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합구령 때문에 재단은 젊은 여성감독을 깜짝 발

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외부의 평가를 통해 후보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오류를 범했다. 신 감독이 동국대 재직 과정에서 '가짜박사 학위' 논란에 휘말렸다는 사실은 재단이 외부로 귀를 열었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비엔날레 감독은 어떤 자리? 100억 규모 미술 이벤트 '전권'

전시 기획자들에게 광주비엔날레 감독은 꿈의 무대다.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미술 이벤트의 지휘자로서 참여작가와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미술인이란만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감독의 연봉은 6천여만원에 불과하지만 국제적인 인맥구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너스다. 여기에서 전시행사를 치를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 주요 언론, 미술계 인사 20여명을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광주비엔날레 감독은 국제미술행사에서 단골 초청손님, 해외 미술행사에서 광주비엔날레 감독은 미술계의 VIP로 대접받는다.



9일 오전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이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 대선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올 대선 재외국민 참여 어렵다"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대선 준비 상황 및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여야간 첨예한 의견 대립 끝에 정치관계법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었다.

특히 이번 대선부터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한나라당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열린우리당 등의 의견이 회의 벽두부터 엇갈렸다. 올 대선에서 전체 285만 명, 19세 이상 유권자 기준 210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줄 경우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선관위가 6월 국회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되면 이번 대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제는 안된다고 한다"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반면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재외국민 중에는 등록이 안된 경우도 있고, 국적이 있지만 신분증명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다"면서 "100일 전부터 부재자 신고를 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등록 안내기간 등이 필요해 훨씬 이전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올해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면 선관위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법안이) 6월 국회를 넘어섰고 현재로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의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체류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해서 경선관리 규칙을 개정하겠느냐"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질문에 "한나라당에 현재 경선관리 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대선을 치른 후에 (변경)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못 고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P는 Windows Vista® Home Premium을 권장합니다.

Intel VIV Core™ 2 Duo Inside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 HP 파빌리온

HP 파빌리온 dv6 5077w 노트북 PC

- 15.5인치 풀HD 디스플레이
- 인텔® 코어™ 2 듀오 프로세서 (T7200)
- 4GB DDR2 메모리 (2GB x2)
- 1TB SATA 하드 디스크
- 13.9mm 슬림 디자인
- HP 스피커
- HP 키보드
- HP 터치패드

HP 파빌리온 dv7046t 데스크탑 PC

- 15.5인치 풀HD 디스플레이
- 인텔® 코어™ 2 듀오 프로세서 (E6700)
- 4GB DDR2 메모리 (2GB x2)
- 1TB SATA 하드 디스크
- 13.9mm 슬림 디자인
- HP 스피커
- HP 키보드
- HP 터치패드

x2 파빌리온 디자인지 6월 15일 - 7월 31일

특별 한정판 성능으로 더 넓은 멀티태스킹과 생산성과 만나보세요.

이 HP 파빌리온 데스크탑 PC를 구매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홈버전도 하드웨어입니다. (허용 조건과 구매 자격에 따라 Microsoft Office Standard 2007 32비트 버전)

이 HP 파빌리온 노트북 PC를 구매하면 HP dv6000 무선노트북이 포함된 HP 스타트 키트도 하드웨어입니다.

HP 지원 센터를 방문하세요! www.hp.co.kr/ips/ps/psindex.jsp

가까운 Digital HP 매장을 찾아주세요 (1588-8800)

"광주여고 부지 문화전당 주차장 활용해야"

환경연 등 시민단체, 광주시·시교육청에 제안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9일 학교 이전이 결정된 광주여고 부지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외곽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문광부와 광주시, 광주시 교육청 등에 제안했다.

광주전남행복발전소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여고 부지가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돼 아파트나 상업건물로 활용될 경우,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근거리에서 위치

한 문화전당의 환경을 해칠 수 밖에 없다"면서 "문화전당 내 주차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곽주차장 건설 사업을 위해서라도 광주여고 부지를 문화전당 외곽주차장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문화전당 주차장 설계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900여 대 기준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초 계획대로 1천500~2천대 규모의 외곽

주차장 3~4곳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문화전당 인근은 상습 교통체증으로 인해 공인기는 상실은 물론 도심질서와 및 거리문화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문화전당 외곽주차장 사업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동구 주민들도 찬성하는 사항이며, 문광부도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광주여고 부지 확보는 물론 외곽주차장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